

사고 유형별로는 유류유출이 63.8%(37건)로 가장 많았으며 오염물질 유출과 물고기 폐사사고 등 수환경변화 12.1%(7건), 유해물질배출 6.9%(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 유출사고의 경우 3월(11건), 4월(8건), 7월(6건) 등 3개월 사이에 모두 25건 발생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수질오염 사고는 지난 94년 146건, 95년 83건, 96년 65건, 97년 65건 등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로 오염원 관리여건이 악화되는데다 급격한 수환경변화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사고와 물고기 폐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112건으로 늘어났다가 울들어 다시 줄어드는 추세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쓰레기 소각로 부산물 처리기술 도입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쓰레기 소각로 부산물인 비산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국내에 도입됐다.

신우환경기술개발(대표 홍성도)은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비산재 처리를 위해 스위스의 종합 환경업체인 '도이치 바브록' 그룹 산하 'CTE'사와 기술 도입계약을 했다고 지난 10월 5일 밝혔다.

비산재는 납,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과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는 유해물질로 현재 지정폐기물 매립지역 이외에는 직접 매립이 금지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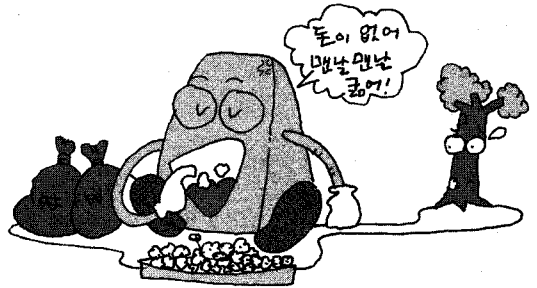
신우환경기술개발은 이날 오후 시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CTE사와 공동으로 '비산재 고품화 처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신기술은 비산재를 알칼리 용해후 시멘트와 특수첨가제를 첨가해 딱딱한 물질로 만들어 (고형화) 오염물질의 분출을 1천년간 막는 기술이라고 이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비산재 처리기술은 스위스 정부가 CTE사와 500만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기술로 국내외에서

소개된 쓰레기 소각로 비산재 처리방안 가운데 가장 실용적이고 안전한 해결방안"이라며 "특히 최근 매립장 건설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도시 소각로 부산물 처리문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환경설비투자 갈수록 줄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중공업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환경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계속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0월 10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항제철의 경우 96년에는 모두 1천694억원을 환경분야에 투자했으나 97년 1천397억원, 98년 628억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96년 168억원을 이 부분에 투자한 강원산업도 97년 26억원, 98년 5억8천만원으로 계속 투자액이 줄었다.

시멘트업종도 상황이 비슷해 97년 환경부문에 61억원을 투자한 동양시멘트는 97년 56억원, 98년 49억원으로 줄었으며 현대시멘트 역시 지난 96년에는 4억9천만원을 투자했으나 98년에는 2억9천만원으로 투자액을 낮췄다.

석유화학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나쁘다. (주)SK의 경우 96년에는 5천924억원을 투자했으나 97년 705억원, 98년 275억원으로 투자비용을 계속 줄였다.

LG-칼텍스정유(주) 역시 96년에는 2천328억원을 환경분야에 투자했으나 97년 2천108억원, 98년 581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쳤다.

전자업계의 경우 삼성전자(주)는 96년 1천254억원을

투자했으나 97년 1천4억원, 97년 1천억원으로 환경부분 투자를 줄였으며 현대전자산업(주) 역시 96년 967억원, 97년 592억원, 98년 368억원으로 계속 줄어왔다.

특히 LG전자(주)는 96년 253억을 환경분야에 투자했으나 97년 133억원, 98년 32억원으로 투자액이 급감했다.

통신업종에서도 대우통신(주)이 96년과 97년에 5천 700만원과 1천900만원을 각각 투자했으나 98년에는 불과 200만원만 환경부분에 사용하는 등 투자 기피현상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초기단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용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련법령 너무 자주 바뀐다"

환경관련 법령이 너무 자주 개정돼 법집행의 일관성 상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10월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행정조직과 관련된 법규를 제외하고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환경부는 법률 36차례, 시행령 19차례, 시행규칙 32차례 등 모두 87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이는 작년의 38차례, 지난 97년의 33차례에 비해 각각 49차례와 54차례 늘어난 셈이다.

환경부는 올들어 지난 상반기에만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 등 전체 환경법률의 3분의 1 가까운 10개법률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를 다시 법체치의 검토단계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먹는물관리법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월2일에 재개정안이 입안되어 같은달 28일 국회에 상정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다시 지난 8월30일 세 번째 개정안을 법체치의 검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입법계획률은 46.6%로 나머지 20개 정부부처의 입법계획률(19%선)보다 2.4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환경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바람에 집행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신뢰성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해양오염 원격감시 체계 구축키로

해양수산부는 시화호에 고정구조물을 이용한 해양오염 원격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동화된 해양오염 측정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10월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온과 염분, 용존 산소, 영양염류, 중금속 오염물질 등의 해양오염 현황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산·학 협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으며 이를 고정구조물에 부착, 해양오염실태 및 오염부하량을 측정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한 연안을 향해하는 선박에도 자동측정시스템을 부착해 선박항로를 따라 해양오염을 원격자동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조 발생해역에도 원격감시 체제를 구축, 적조 예방 및 감시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인천과 제주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에 4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화호 고정구조물에 해양오염 자동측정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오는 2001년까지 해양오염자동측정시스템을 상품화해 이를 인근국가 및 관련업계 등에 판매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오염측정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원격자동측정 시스템을 개발·운용중"이라며 "앞으로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